

육계산업의 현황과 AI 대응

이 문 용 대표이사 사장
(주)하림

우리나라 육계(닭고기)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농축산 분야 대부분이 그렇듯이 국제 경쟁에는 아직 취약하다.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의 생산과 원가 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국내 닭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육계업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다. 하지만 최근 들어 AI(Avian Influenza)라는 신종 질병이 발생하면서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

찬바람이 일고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AI가 번지기 시작하면 AI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도 활성화한다. 특히 HPAI(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력, 가금류에

대한 막강한 살상력으로 인해 일단 발생했다 하면 가금류 폐사에 따른 직접 피해 뿐 아니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정책, 닭고기와 오리고기, 계란류 등의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¹⁾.

AI 발생에 따른 비용은 가금류의 집단폐사와 살처분 정책에 따른 직접 피해 보다 과도하게 형성된 공포에 의해 더 많이 발생한다. 1997년 HPAI의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유포·확산되면서 상상속의 공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AI 바이러스가 아닌 'AI 공포 바이러스'에 감염돼 닭고기나 오리고기, 달걀 등의 소비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와 치킨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도산하는 등 업계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국제 경쟁력을 키워 가려는 업계의 노력이 한순간에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닭고기라는 효율 좋은 단백질 식품의 섭취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거부되면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²⁾.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발생원인과 이동경로 등 AI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AI에 대한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첫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은 학계나 전문가의 몫이어서 해당분야에서의 노력과 성과에 기대해야 하겠지만 AI 대응방식의 문제는 정부와 업계, 이익집단 등이 함께

1) 2006년 전라북도의 익산과 김제에서 발생한 AI로 정부(전라북도)의 보상과 구매액은 116억원에 달했다. 익산지역의 AI 발생에 따른 (주)하림의 피해는 종란 600여만개의 폐기 및 부화장 가동중단 등에 의한 직접 피해액 67억4천여만원, 영업 손실액 132억여원 등이었다.

2) 2003년 12월~2004년 3월 AI로 인한 사회 전체의 후생(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의 합계) 감소액은 최대 3,338억원으로 추정됐다(송주호 등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11).

〈표 1〉 국민 1인당 연도별 육류(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소비량 변화

(단위 : kg)

구분	1990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돼지고기	11.8	16.1	16.5	17	17.3	17.9	17.4
쇠고기	4.1	8.4	8.5	8.5	8.1	6.8	6.5
닭고기	4	6.1	7	8	7.9	6.6	7.3
계	19	30.6	32	33.5	33.3	31.3	31.9

〈표 2〉 주요 쌀소비국 1인당 쌀소비량

(단위 : kg, %)

비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년비
한국	104.9	102.4	99.2	96.9	93.6	88.9	87.0	83.2	82.0	80.7	78.8	-2.4
일본	67.3	66.7	65.2	65.1	64.6	63.6	62.7	61.9	61.5	-
대만	58.8	58.4	56.7	54.9	52.7	50.1	50.0	49.1	48.6	48.6	...	-

※ 자료 : 통계청

고민하여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AI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육계산업의 현황과 전망

닭고기는 우수한 단백질 식품(백색육)으로 식단이 선진화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5억 마리 미만이었지만 2006년 6억 마리를 상회했다.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2005년을 정점으로 쇠고기를 추월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돼지

고기가 삼겹살의 기형적 과잉소비로 전체적인 소비량은 많지만 증가세는 멈춰 있다.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육류 소비량의 증가는 참살이(well-being)의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닭고기가 증가분의 상당량을 감당할 가능성이 높다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닭고기 소비량이 계속 늘어 2007년도에는 1인당 소비량이 2006년보다 4% 이상 증가한 8.3kg(정육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했다.

미국에서는 닭고기 소비량 증가세가 다른 육류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지난 1970년 이후 최근까지 쇠고기와 돼지고기 소비는 소폭 하락한 반면 닭고기는 20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1990년 19.9kg에서 2005년 31.9kg으로 증가했다. 반면 쌀 소비량은 1990년 119.6kg에서 2005년 80.7kg로 줄었으며, 2006년에는 78.8kg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량 자체는 일본이나 대만에 비

3)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타 육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닭고기의 지방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타 육류에 비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 예방에 좋다.

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앞으로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들의 식품소비가 쌀 등 곡물, 즉 탄수화물 식품에서 닭고기 등 단백질 식품으로 바뀌는 것은 소득향상에 따른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며 특히 공급측면에서의 노력⁴⁾ 뿐 아니라 소비측면에서 견인하는 자연스러운 성장이 예견돼 미래는 밝은 편이라 하겠다.

더불어 육계산업은 계열화 사업이 다른 축산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서 있어 사육농가들의 소득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외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 하겠다.

3. AI에 대한 위험담론

2003년 국내 첫 발생이후 AI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단했다. 언론과 정부, 보건의료계, 관련업계 등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정보와 위험담론들이 국민들의 공포를 부

추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확한 사실보다 인체감염의 위험과 대재앙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담론들만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디어와 보건의료계, 정책 당국은 두려움의 재생산 경쟁에 나선 느낌을 줄 정도로 국민들을 불안케 했다⁵⁾. 특히 언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추측이나 가능성을 사실인양 보도하거나 사실로 오인할 수 있도록 방임적 보도 태도를 보였다. 해외의 발생사례, 일반화할 수 없는 특별한 인체 감염과 사망사례, 방역현장 등을 중계방송 하듯 흥미위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다.

일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최악의 조건들을 투입해야 도출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공공연하게 발설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AI가 사람에게 감염되고 합병증을 통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선별적이라는 의견들

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인플루엔자의 위험을 얘기할 때 흔히 1918~1919년 창궐한 ‘스페인 독감⁶⁾’을 예로 든다.

스페인 독감의 희생자는 실제로 엄청났다. 1918년 8월에서 10월 사이 미군의 20%가 독감에 감염됐고 그에 따른 폐렴 등 합병증에 의한 미군 사망자수는 2만4,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⁷⁾. 이 독감은 3차례에 걸쳐 인류를 습격했는데 사망자수가 영국에서만 15만명 이상이었고 전세계적으로 2,100만명~2,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당시 사망자가 5천만명에 이르렀다는 최근의 연구보고도 있다.

그렇다면 현재 발생한 AI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병이 스페인 독감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대처하기 나름이라는 의미다.

특정 질병이 대재앙의 위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체의 독성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한 환경적 조건들이

4) (주)하림의 경우 2004년 10월 이후 잔류 항생제 검사 시행(사육단계), HACCP 체계가동(가공단계) 등 닭고기의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Air-chilling System 과 One Way System이라는 차별화된 공정, 선진국형 보관시설인 정온실 운영 등으로 육계산업을 첨단 식품산업으로 도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5) 2003~2004년 국내 첫 발생시 4개월 동안 신문·방송 등 전통미디어와 인터넷 매체가 쏟아낸 AI 관련 보도는 1만건을 넘었고 국내 발생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2004~2005년에도 해외 발생 등을 집중보도하면서 2005년 11월~2006년 3월까지 4개월 사이 AI 관련 보도는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4천여건이 검색될 정도로 경쟁적이었다. 2006년 시의 국내 발생시의 유력 신문매체 등 일부 언론은 상당히 성숙한 보도태도를 보였으나 TV 매체 등의 보도태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일부 신문들은 해외 발생사례를 국제면에 처리하고 국내 발생기사도 비중을 크게 낮춰 취급했으며 닭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균형보도가 이뤄졌다.

갖춰져야 한다.

1918년은 전염병이 돌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었다. 4년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으로 장병들은 상상키 어려운 최악의 조건들이 가득 찬 참호속에서 혹독한 4년을 견뎠으며 전쟁에 지친 유럽은 또 다른 적인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인플루엔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었다. 또한 장병들은 전선으로 끊임없이 이동했고 증기기관을 이용한 사람들의 빠른 교류가 전염병의 이동속도를 높였다. 정말 중요한 점은 기근과 최악의 생활여건, 전쟁이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사람들의 면역력은 극도로 취약해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보건 의료체계 역시 마비상태였고 생존만이 최우선적 가치였던 당시 사람들에게 개인위생은 사치에 불과했을 것이다. 스페인 독감으로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사(致死)기록을 제공한 당시의 상황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스페인 독감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라 하겠다. 스페인 독감의 대재앙이 다시 도래하려면 오늘날의 방역체계는 타임머신을 타고 1918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참혹한 전쟁과 망가진 방역체계, 기근과 생존의 아귀다툼, 열악하기 그지없는 위생시설과 사람들의 위생관념 등 89년전 상황을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4. 공적 언술의 문제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들은 전문가들의 공적 언술(言述)이 왜 신중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한다.

- '1918년 5천만명의 인명을 앗아갔다는 스페인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면 공황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백신 전문가의 주장이 유력 매체에 실린 적이 있다.⁶⁾
- 2006년 12월 전북지역에서 열린 방역대책회의석상에서 방역기관의 한 책임자는 'AI에 감염된 닭의 분변 1g이면

닭 1백만 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언론발표를 통해 'AI가 발생한 전북 지역 닭·오리 농장 종사자들에게 대해 AI 바이러스인 H5N1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40대 중반의 농장 관계자 1명이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다시 유행한다면',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의 분변 1g을 1백만 마리의 닭에게 주입시킨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한 예들이다.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의였겠지만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방식의 언술(言述)은 특히 건강과 질병 등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극도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정책을 다루는 정부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주의 의무가 게을리 되는 경우들이 많다.

6) '스페인 독감'이라는 명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이 독감은 1918년 초여름 미국 혹은 프랑스에 주둔한 미군병영에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당시 1차대전 교전국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실이 알려지면 전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 우려하여 보도를 통제할 반면 교전국이 아니었던 스페인에서는 독감의 창궐을 사실대로 보도함으로써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질병의 역사>, 프레더릭 F. 카트라이드·마이클 비디스 공저

7) 1차대전 당시 미군 사상자수가 3만4천명 정도였으니 스페인 독감에 의한 인명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8) 조선일보 2005. 10. 15일자에 실린 존 클레멘스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의 '조류독감 대비, 한국이 주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무증상 감염’ 발표는 여러 가지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몸 속에 바이러스가 침입한 흔적은 있지만, 감염에 따른 증상은 전혀 없는 이른바 ‘무증상 감염’은 국내에서 새로운 사실도 아니거니와(2003년 AI발생시 매몰작업자 가운데 9명이 무증상 감염으로 뒤늦게 확인됨) AI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가 안정을 찾아갈 시점이어서 시의성이 적절하지도 않았다.

특히 ‘타미플루가 무증상 감염에 그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부언도 따랐다⁹⁾. 이 발언은 ‘AI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 불상사를 일으킬 뻔 했지만 타미플루를 복용함으로써 별다른 증상없이 지나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AI가 발생한 다른 농장 종사자나 매몰작업에 며칠씩 함께 했던 업계 종사자들에게서는 왜 무증상 감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인가?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았던 2003년도 무증상 감염자들은 타미플루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답을 할 수 없다면 타미플루가 무증상 감염에 도움을 준 것 같다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코멘트는 추측성 발언에 불과하다. ‘아니면 그만’ 식의 바람같은 발언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데 한 몫 했을 뿐이었다.

‘타미플루를 복용하지 않았더라면 무언가 중요한 증상을 나타냈고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왜 나왔을까’를 업계나 양계농민들은 궁금해한다. 인체감염의 불안과 공포의 불씨를 끝없이 일으키는 보건당국과 연구기관들의 의도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무모함과 경박함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심어준 사례도 있다. 예컨대 2006년 12월 전북 익산지역에서 AI가 발생하자 일부 학교가 발생 농장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등교를 막았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언론의 따가운 질책으로 이어져 치구니없는 조치는 곧 해소됐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였다.

또한 살처분 매몰작업에 군부대 장병들을 지원해달라는 시군 방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부대장에 의해 거부됐다. 인체감염이라는 만약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집단생활을 하는 장병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대장의 판단이 가늠할지 모르지만 그 역시 무지에 의한 오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직접 닭을 키우는 농민과 관련 업계 종사자, 살처분 매몰작업에 나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이 무릅쓰는 위험을 앞장서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외국의 인체감염 사례와 부풀려진 치사율에 의해 각인된 불안과 공포 때문이라고 하겠다.

국민들의 불안은 누가 잠재워 주어야 하는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9) 연합뉴스 2007. 1. 11. 15:30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농장주의 가족 3명 중 사육시설 출입빈도가 높아 AI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기회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초기 방역과정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게 무증상 감염에 그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덧붙였다고 한다.

진실에 기반한 구체적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학교와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5. 인체감염에 대한 진실

일반 국민은 물론, 군인과 교사들마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AI의 인체감염과 사망에 대한 진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흔히 조류독감이라 불리는 HPAI는 철새 이동에 따라 계절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관리 대상인 HPAI가 보고되기 시작한 2003년 4월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

럽 북미 등 남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이 보고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하여 그해 10개 시·군지역에서 19건이 발생했으며 2006년 12월 전북 익산지역에서 잇따라 2건이 발생한 이래 2007년 2월 현재 5건이 발생했다.

인체감염 및 사망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AI의 집중적인 발생과 인체에 감염되어 생명까지 앓아가는 상황은 낙후된 제반 환경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인체감염과 사망

은 방역체계가 허술하고 보건 위생에 대한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의 이슈라는 얘기도.

세계보건기구에 확인된 인체 감염 및 사망 사례는 2003년 이후 2007년 2월 현재 272명 발생에 166명 사망이다. 발생 국가는 올해 나이지리아가 추가되면서 아제르바이젠, 캄보디아, 중국, 지부티,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터키, 베트남 등 11개국이다. 이들 나라에게는 미안한 노릇이지만 모두 저개발 국가이다. 터키(4,200불)와 태국(2,700불)을

〈표 3〉 AI 인체감염 및 사망자수(2007. 2. 6 현재)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발병	사망	발병	사망								
아제르바이젠	0	0	0	0	0	0	8	5	0	0	8	5
캄보디아	0	0	0	0	4	4	2	2	0	0	6	6
중국	1	1	0	0	8	5	13	8	0	0	22	14
지부티	0	0	0	0	0	0	1	0	0	0	1	0
이집트	0	0	0	0	0	0	18	10	2	2	20	12
인도네시아	0	0	0	0	19	12	56	46	6	5	81	63
이라크	0	0	0	0	0	0	3	2	0	0	3	2
나이지리아	0	0	0	0	0	0	0	0	1	1	1	1
태국	0	0	17	12	5	2	3	3	0	0	25	17
터키	0	0	0	0	0	0	12	4	0	0	12	4
베트남	3	3	29	20	61	19	0	0	0	0	93	42
합계	4	4	46	32	97	42	116	80	9	8	272	166

※ 자료 : 세계보건기구(<http://www.who.int>)

10)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차단시스템이 준비돼 있고 완벽하게 작동된다. 의심 신고후 확진까지 48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고 광범위한 살처분 및 이동통제가 이뤄진다. 감염이 확인돼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농가에게는 시가 보상이 이뤄진다. 시가 보상 정책이야말로 농장주들이 의사 증세까지 신고할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표 4〉 AI 인체감염 및 사망 발생국의 경제 상황

국가명	GDP(억 달러)	1인당 GDP(달러)	비고
아제르바이젠	85.4	1,023	2004년
캄보디아	56	397	2005년
중국	2조2,600	1,709	2005년
지부티	6.25	769	2003년
이집트	770	1,111	2005년
인도네시아	2,760	1,259	2005년
이라크	292	1,013	2005년
나이지리아	1,435	1,380	2005년
태국	1,764	2,724	2005년
터키	3,626	4,251	2005년
베트남	509	612	2005년
대한민국	7,800	16,291	2005년

※ 자료 : 외교통상부 · 국가정보원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1인당 GDP가 1,000불대로 우리나라 (2005년 기준 16,000 달러)의 15 분1 안팎이다.

이들 국가의 경우 가금류를 포함한 축산물의 방역 체계는 물론이고 공중보건 시스템도 허술하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앞마당이나 뒤뜰에서, 심지어는 집안에서 사육된다. 생활방식과 닭의 사육 및 유통 방법이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과는 다른 것이다.

위생과 보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낮아 AI가 발생해도 격리나 이동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발

생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발생이 확인된 오염지역 내 살처분도 국가가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농장주에게 맡겨져 있다. 방역에 틈이 많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은 지나치게 강력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정도다.¹¹⁾

60%대의 치사율만 보면 AI에 두려움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통계의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의 AI 감염자들은 감염된 경우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니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감염됐다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인 뒤 자연 치유된 환자들은 감염자 통계에서 빠지는 것이다. 상태가 최악인 환자들만이 감염 사례로 집계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을 환산하게 되므로 그렇게 계산한 사망률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국가도 선진국과 같은 방역체계와 의료시스템이 갖춰진다면 사망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EU 등에서는 AI가 발생하지만 인체감

11) 2006년 11월 25일자 미 시사주간지 'TIME'은 'Why We Worry About The Wrong Things?' 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왜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에 과장된 공포를 갖는지를 뇌과학을 통해 분석했다. '위험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기사의 요지는 '사람들이 상시 노출돼 있는 위험은 무시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위험은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일반 독감에 의한 합병증으로 매년 3만6,000명이 희생되지만 아직까지 단 1명의 희생자도 발생시키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연간 7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콜레스테롤보다 아직 희생자가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은 광우병에 대해 더 큰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1차적으로 공포반응을 보인 뒤 이성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다.

염이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AI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느냐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본성¹²⁾이라 할 수 있다. 언론들도 불확실성과 위험, 공포 등에 관련된 뉴스를 쫓고 비중있게 다룬다. 이는 언론의 속성이다.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 일반독감의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매년 3만6,000명 정도라고 한다. 이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한해 최소한 5,700여명이 일반독감에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AI에 의한 인체감염이나 사망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AI 바이러스의 독성이 일반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 독성이 현저히 낮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사망자로 말하자면 200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만 2,000여명이 자살했으며 10만명당 자살률이 무려 26%나 된다. 교

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들도 7,700여명이었다. 하루에 21명이 비명횡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AI에 대한 걱정보다 자살자가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사회적으로 더 시급하다. 사회의 에너지가 잘못 쓰이고 있는 것이다.

6. 보완해야 할 AI 긴급행동지침

실체없는 공포로 인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은 적정한 대가가 아니라 낭비일 뿐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2004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AI 발생시 상황별 긴급행동지침의 적정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발생상황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반영시켜 개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정지역을 설정하여 이동통제나 살처분 매몰을 시행하는 용단폭격식 방역조치가 계속 유효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정책은 과감하지만 과도한 대응으로 비용 대비 효율은 높지 않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불안을 안겨준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들어 매뉴얼에 의한 긴급행동지침이 정확히 시행됐는데도 조기 종식에 실패했다.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를 오염지역으로, 반경 3km를 위험지역으로, 반경 10km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한 이동제한 및 살처분 범위의 적정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살처분 매몰작업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익산지역의 발생 농장과 위험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살처분 매몰작업은 초기 인력동원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인력시장에까지 신세를 져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양계장안에서 닭을 신속하게 포획하고 매몰하는 작업은 무경험자에게는 매우 어렵고 양계장 자체가 비좁아 작업자의 숫자가 많은 것이 능사가 아니다. 소수의 전문적인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12)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포획해 생계 운반차에 싣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작업반. 생계 포획만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경험자들에 비해 몇 배의 작업능력을 갖고 있다. (주)하림과 같은 대규모 육계 계열화 주체들은 전문 상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야 신속하고 능률적인 살처분 매물작업이 가능하다.

익산지역 살처분 매물작업은 초기에 인력부족과 작업능률 저하로 고전하다가 ‘상차반¹³⁾’ 인력들이 투입되자 엄청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는 매물작업은 전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작업효율은 극히 낮다.

전문 상차반들을 살처분 매물작업에 활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특정 지역 단위로 전체 가축을 살처분 매물하는 초토화 작전보다 발생 농장만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살처분하는 외과수술식 도려내기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 외과수술식 살처분 방식은 폐기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염지역에 대한 출입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차단방역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무작위로 소독약을 뿌려대는 차량 자동소독 시설도 불쾌감을 안겨준다.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불

필요한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보다 정밀한 통제 시스템과 외과수술식의 정교한 살처분 매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7. 맺는말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재배와 사육의 농경문화에 안착하면서 가축의 질병과 더불어 살아야 했다. 인플루엔자 역시 그러하며 AI 역시 예외가 아니다. AI 바이러스는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다. 닭과 칠면조 같은 가금류에 치명적이면서 그 변종들이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새로운 질병의 불확실성은 사회적 공포를 야기한다. 공포의 경로는 매스 미디어다. 사람들은 새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 접한다. 미디어는 그 속성상 불확실성을 과장하고 위협을 증폭시키게 된다. 동남아 저개발 국가들에서 발생한 AI 인체 감염의 위협적인 소식들이 중계방송되듯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AI는 더욱 두려운 존재로 각인됐다.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피

해와 위험이 강조됐고 정부는 국민들의 공포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충분한 학습비용을 지불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다. 정확한 정보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범위한 세계적 확산은 한동안 매우 특별하고 불확실한 존재였던 AI가 이제 인류에게 보다 친숙해지고(?) 지구상에 온존하는 수많은 인플루엔자 중의 하나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쯤이면 AI가 발생했다고 호들갑떠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계절이 오면 평소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감염되거나 유행하지 않도록 방역을 강화하고, 설사 감염된다 하더라도 쉽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의료적 처방들을 갖춰놓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미래지향적 태도이고 성숙한 사회의 자세¹⁴⁾다.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지혜는 AI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13) 2004년 1월 중순 일본 아마구시 현에서 시가 발생, 약 2만6000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등 한동안 몸살을 앓았으나 다음달(2월) 일본 농림수산성이 9일 발표한 육류 소매 가격 조사에 따르면 2월 2일~6일까지 전국의 닭고기 가격은 6개월 전인 2003년 8월에 비해 약 1%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2004년 2월 6일 델라웨어 주 일부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닭고기 소비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 미국의 대표적 닭고기 생산업체인 ‘필그림스 프라이드’의 레이 애킨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조류독감)이 판매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농업전문지 애그리뉴스는 10일자에서 미국 닭고기 업계의 이런 자신감의 비결은 양계 농가와 보건 당국간 전염병 초기 대응 체제가 잘 갖춰져 있고 미국 소비자들이 이를 신뢰한다는 데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2004. 2. 12 3면)